

연구윤리규정

2015.04.01. 제정
2021.04.16. 부분개정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명칭) 이 규정은 『한국복식』 연구윤리 규정'이라 한다.

제 2 조(목적) 이 규정은 『한국복식』 간행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

제 3 조(논문의 신규성)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 단,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병기해야 한다.

제 4 조(인용방법)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“원고 작성 지침”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해야 한다.

②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,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 제 2 항의 경우,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병기하고,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해야 한다.

제 5 조(저자됨 Authorship)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,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.

② 논문 저자의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.

③ 저자됨(Authorship)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 아래 각 항을 모두 충족 시 저자로 인정되며, 한 가지라도 불충족 시 기여자로 한다.

㉠ 연구의 개념과 설계,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.

㉡ 연구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다.

㉢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였다.

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들이 제대로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데 합의를 하였다.

제 6 조(부정행위) 연구부정행위는 관계법령(교육부훈령 제153호 제12조)에 의거한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저자 표시, 부당한 중복게재,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,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,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.

- 제 7 조(제재) ① 투고논문이 제 3 조, 제 4 조, 제 5 조, 제 6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경우,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내에 통고해한다.
-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단, 이의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.
- ④ 이의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제 3 장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

제 8 조(사후심사) 『한국복식』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.

제 9 조(사후심사의 요건)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해야 한다.

- ①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『한국복식』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
- ②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될 만한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

제 10 조(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) ①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.

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겹봉에 ‘사후심사요청’임을 명기하되, 발신자의 신원을 겹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1 조(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)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.

제 12 조(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)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제 4 장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

제 13 조(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)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4 조(질의서의 우송)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 연구부정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

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.

제 15 조(답변서의 제출) 위 제 14 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.

제 5 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

제 16 조(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)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 17 조(사후심사 결과의 통보)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 18 조(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)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.

- ① 기관 홈페이지 및 차호 『한국복식』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. 『한국복식』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.
- ② 해당 논문 필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.

제 6 장 제보자의 보호

제 19 조(제보자의 보호)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.

제 20 조(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) 위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배한 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.

제 7 장 이의 절차

제 21 조(이의당사자)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 및 게재자와 신청자는 『한국복식』 편집위원장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,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
제 22 조(위원의 위촉) 위원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단 판정을 내린 편집위원 등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.

제 23 조(절차) ①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원장에게 모두 제출해야 한다.
② 이의절차는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4 조(확정)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 8장 보칙

제 25 조(규정의 개정) ①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.
②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,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.

제 26 조(보칙) 이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[2021. 4. 16]

본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